
연대 · 공조를 통한 국익 극대화 통상정책 로드맵

2024. 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I .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성과	1
II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3
III . 우리 통상정책의 비전과 과제	5
IV . 세부 추진 과제	6
1. 세계 제1위 FTA 경제운동장 확보	6
2.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및 경제안보 강화 총력	9
3. 주요국 전략적 협력 강화 및 통상현안 집중 관리	13
4. 글로벌 사우스로 수출 · 투자 · 공급망 다변화	18
5. 신통상규범 정립 주도 및 다자무역질서 복원 기여	21
6. 국익 극대화를 위한 통상정책 추진 역량 강화	25

I.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성과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책 수립 및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상여건 개선 및 대외 불확실성 완화

① 산업·통상 연계를 통해 주요국 자국우선 통상조치 총력 대응

- ① ^{美 IRA} **북미 시장 선점 기회로 활용**, ^{美 수출통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인 장비공급 여건 조성, ^{美 반도체법} 우리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 결정
* 삼성 64억불, 애플릭스 0.75억불, SK 하이닉스 4.5억불
○ ^{美 IRA}에 신속·적극 대응한 결과 가이던스에 우리 의견* 상당 반영
* ▲ 렌트·리스 등은 북미조립 요건 제외, ▲ 국내에서 배터리용 광물 가공 가능 등
** 해외우려기관(FEOC) 관련 흑연에 대해 유예(전환)기간 부여(~'26)
○ ^美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리기업을 **VEU***로 지정('23.10월)
⇒ 중국 內 공장 운영, 투자 불확실성 완화
* VEU 지정 기업은 기업별 지정된 품목을 '무기한'으로 '개별허가 없이' 수출 가능
- ② ^{日수출규제} **조치 해소 및 한-일관계 정상화**(^韓 화이트리스트 복귀)
○ 한-일 양국 신뢰회복에 따른 한-일 관계 정상화 및 화이트리스트 복귀, 4년 만에 ^日 수출규제 조치 완전 해소('23.7월)
- ③ ^{EU CBAM} **우리 철강기업의 제도 이행 부담 완화**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이행법'에 국내 **철강업계 요구 일부 반영***
* 제품 내재배출량을 생산경로별(예: 전기로/고로)로 구분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

- ① ^{IPEF} 출범멤버로 참여, ^{필라2} **공급망 협정 발효**('24.4) 및 이행 본격화, ^{필라3} 청정경제·^{필라4} 공정경제 서명('24.6) 후 발효 준비 중
- ②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선도 등 주요국과 디지털 통상 협력 강화
○ ^{韓-싱} DPA 발효('23.1월), ^{DEPA*} 가입 발효('24.5월), ^{EU}와 협상 개시('23.10월) 등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상·뉴질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을 위한 통상협정('21.1월 발효)
- ③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논의 및 규범·표준 협상 적극 참여
* ^{IPEF} 청정경제 협정, 기후클럽 출범 멤버로 참여 등

③ 전세계 GDP의 85%에 이르는 경제운동장 구축

❶ 중동·중남미·인태지역으로 통상네트워크 지평 확대

- '23년 GCC·UAE·에콰도르·과테말라·IPEF 등 역대 최대 협상타결

* 총 5건 타결(기존 '14년 5건 타결, '19년 4건 타결)

- 인태 경제협력플랫폼인 IPEF에 주도적 참여,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한 논의 지속 합의 등 역내 촘촘한 통상네트워크 확립

❷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신흥국 중심으로 폭넓은 협력 요소를 포함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본격화

* [협상개시] 조지아('23.11), 몽골('23.12), 태국('24.3), 탄자니아('24.6)

[여건조성] 케냐, 모로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

❸ 신흥 경제권역으로 무역·투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유연한 협력모델인 TIPF를 본격 추진하여 23개국과 체결 성과

※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 법적 구속력이 없는(non-binding) 포괄적 성격의 MOU

④ 수출 흑자 전환, 외투 신기록 달성

❶ 美, 베트남, 중동 등 정상순방 및 180여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시장 확대 및 협력 고도화 (민간 MOU 447건)

- 정상외교로 미·영 등과 전략적 첨단산업·공급망 협력관계 구축, 사우디·UAE·카타르 국가와는 853억불 경제성과 창출

❷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역대 최대('22년)·3위('23년) 수출, 역대 최대 외투 달성

- 특히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10개월 연속('23.10월~) 무역흑자·수출플러스 동시 달성
- '23년 외국인직접투자 327.2억불(신고)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 '24년 상반기 기준 153.4억불(신고)로 유치 호조세 지속

II.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 공급망 중심 경제안보 리스크 확대 및 세계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① (경제안보 리스크 확대) 자유무역 기반의 공급망 세계화(Globalization)가 퇴조하고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

* [美-中] 美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 對中 수출·투자 제한 지속
[G7] 러시아산 금(金) 금수 합의, 석유 금수 합의 → 석유상한제 논의

○ 美는 상품분야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대용량)배터리·의약품·핵심 광물 등 4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내 생산기반 구축 유도

* 이중 반도체는 최우선 분야, 美는 중국 반도체에 고강도 수출통제 조치 발동 ('22.10월)

② (세계경제질서 변화) 글로벌 경제 운용 메커니즘이 효율성·경쟁력 → 정치체제·자원·기술 등으로 복잡화되며 패러다임 변화 추세

* 국제질서가 안보, 기술, 자원 등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블록으로 재편되는 추세

◇ 경제안보 강화, 공급망 재편 대응 위한 통상개입적 산업정책 확산

① (산업·통상 융합정책) 경제안보 인식 확산 및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주요국들의 자국중심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산업정책 본격화

○ 전략적 산업정책이 교역·투자와 결부되어 통상정책과 융합된 형태로 추진

전세계 GVC 참여율(무협)



부활하는 각국의 산업정책

	▶ 美 반도체법 추진 → 반도체 520억불 투자
	▶ EU 반도체법 추진 → 430억 유로 투자
	▶ 14.5규획('21) → 핵심기술 1조 위안 투자
	▶ TSMC 파운드리 유치에 4.8천억엔 투자

②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미중 간 전략경쟁 격화로 자유무역질서 퇴조 → 국가 안보 고려가 각국 주요 경제정책에 중요한 영향

○ 국제분업이 구조화된 환경에서 관세, 거래 금지 등의 정책이 강화되며, 상호의존성 자체가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화되는 反 글로벌화 대두

○ 경제제재 범위가 반도체·AI·수퍼 컴퓨팅 → 바이오테크·클라우드 등으로 확대

◇ 미완으로 끝난 MC-13에서 재확인된 다자통상체제의 약화

- ① (분쟁해결 기능 약화) '19년말 WTO 상소심(2심)이 실질적으로 정지되면서, 다자체제에서 회원국 간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 약화***

* '21년 9건, '22년 8건 등 WTO 제소는 지속 → 1심 이후 회원국간 임시상소중재 절차 및 합의 등을 통해 종국적 분쟁해결 사례 점증

- ② (다자협상 정체) WTO는 컨센서스 방식의 한계 및 개도국과 선진국간 이견 심화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 기능 약화**

⇒ WTO의 다자통상플랫폼 기능 약화와 함께 **세계경제질서 파편화** (국가별 각자도생, 우방국·유사입장국과의 협의체 구축* 등)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미-EU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대응 방향

- ◆ 그간의 통상정책 성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변화하는 대외 여건을 반영한 통상정책 방향 설정 필요

- 공급망 중심 경제안보 리스크 확대 및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 **넓고 촘촘한 통상 네트워크 구축 및 이행·활용 강화, 글로벌 사우스로의 수출·투자·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 완화 및 경제통상네트워크 확대

- 경제안보 강화, 공급망 재편 대응 위한 **통상개입적 산업정책 확산**

⇒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및 경제안보 강화에 총력 대응**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 관리 및 통상현안 집중 관리 등 굳건한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전략 전개

- 우리나라 발전의 기반이 되어주었던 **다자경제질서의 마비**

⇒ **신통상규범 형성 주도적 참여**를 통한 rule-setter로서의 입지 강화 및 **다자 협의체에서의 구심점 역할 수행** 등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

Ⅲ. 우리 통상정책의 비전과 과제

비 전

연대·공조의 통상을 통한 국익 극대화

목 표

경제안보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

① 5대 수출강국 도약

② 통상네트워크 90% 달성 (GDP 기준)

세부
추진
과제

① 세계 제1위 FTA 경제운동장 확보

- ① 신흥시장으로 FTA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
- ② 핵심·주력시장에는 더 촘촘한 FTA망 구축
- ③ 넓어진 경제운동장에서 기업 FTA 활용 제고

②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및 경제안보 강화 총력

- ①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다자 협력 강화
- ② 핵심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외투유치 촉진
- ③ 무역·투자 및 기술안보 강화로 전략자산 촘촘히 보호

③ 4대 주요국 전략적 협력 강화 및 통상현안 집중 관리

- ① (對美) 첨단산업·공급망 동맹 격상 및 대미 통상리스크 적극 대응
- ② (對EU) 첨단기술 공급망 중심의 협력 플랫폼 다각화
- ③ (對日) 미래 지향적인 한·일 경제통상 新협력관계 구축
- ④ (對中) 다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의 경제협력 추진

④ 글로벌 사우스와 경제협력 지평 확대

- ① 글로벌 사우스와 광역 단위의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
- ② 수출·투자 및 공급망 다변화 집중 지원
- ③ 원조와 국익이 조화되는 'K-산업 연계형 ODA' 추진

⑤ 신통상규범 정립 주도 및 다자무역질서 복원 기여

- ① 신통상규범 형성에 주도적 참여
- ② 다자 협의체에서 구심점 역할 수행

⑥ 국익 극대화를 위한 통상정책 추진역량 강화

- ①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점검 및 관리 강화
- ② 미래 리스크 선제적 대응 위한 협력·관리 체계 구축

통상
환경

- 경제안보 리스크 확대 및 세계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 경제안보 강화, 공급망 재편 대응 위한 통상개입적 산업정책 확산
- 다자통상체제의 마비, 자국 이기주의 통상정책 고착화

IV. 세부 추진 과제

1 세계 제1위 FTA 경제운동장 확보

1 신흥시장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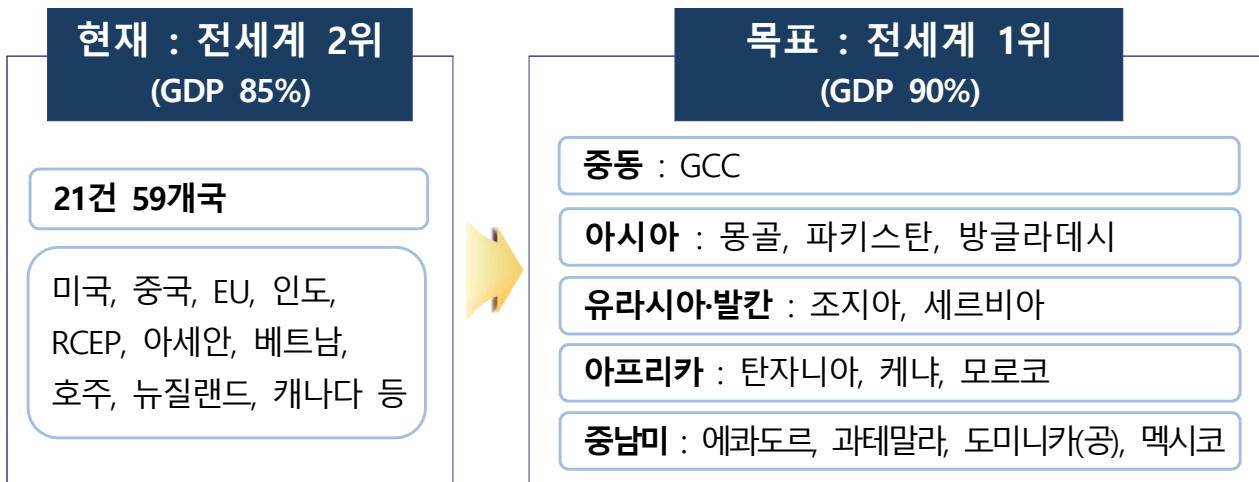
- ◆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신흥시장 거점국과 우선 FTA 체결 후, 인근 미개척국가로 연결망 확산

1. 아시아·아프리카 주요 신흥국과 EPA 성과 도출

- (아시아권) 세계 10대 자원부국 몽골과 조기 타결 모색, 파키스탄·방글라데시 협상 조기 개시로 인도와 함께 서남아 통상벨트 구축
- (아프리카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으로 탄자니아('24.6, 개시)·케냐와 조속 협상 추진하여 동아프리카공동체 협력 기반 마련
 - 북아프리카 시장확대를 위해 모로코·이집트 협상 개시 여건 조성
- (신흥시장권) 유라시아 교역 중계지 조지아는 연내 성과도출 모색
 - 발칸지역 생산기지이자 리튬·아연 등 핵심자원 보유국 세르비아, 카리브해 거점국가 도미니카(공)과도 조속한 협상개시 추진

2. 협상 타결이 완료된 중동·중남미 지역은 차질없는 발효 추진

- (중동권) 한-GCC FTA('23.12, 타결), 한-UAE CEPA('24.5, 서명) 발효로 중동시장에서 中·日 등 대비 우리 상품·서비스 경쟁우위 확보
 - * 걸프협력이사회(GCC) 참여국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 (중남미권) 한-에콰도르 SECA('23.10, 타결), 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24.1, 서명) 발효로 천연자원 공급망 및 중남미시장 확보
 - 멕시코·메르코수르 등 주요 경제파트너와 협상 재개 여건 조성
 - * 남미공동시장(MERCOSUR) 참여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2 핵심 · 주력시장에는 더 촘촘한 FTA망 구축

추진전략

- ◆ 인도·태평양 지역내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로 미·중 외 새로운 성장 돌파구인 거대 인도·태평양 시장 확보

1. 인도 · 태평양 핵심국가와 다층적 통상네트워크 강화

- (양자) 한일중 FTA 협상 재개('19년 협상중단)로 경제협력 고도화, 말련·태국과 신규 양자협정 체결로 핵심 아세안국 진출 확대
- (다자) CPTPP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우선 주력

2.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기존 FTA 업그레이드 추진

- (영국) 첨단기술 선도국인 영국과 기존의 FTA에 디지털·공급망·바이오 등 新통상규범을 추가하는 차세대 FTA 모델 정립
- (칠레) 자원부국 칠레와 타결 추진으로 공급망·에너지 협력 강화
- (인도·중국) 인도와 낮은 상품자유화율 제고를 위한 개선협상 진전, 중국과 규범·자유화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투 개선협상 진행
- (아세안) 한-아세안 FTA 개선으로 디지털, 공급망 등 협력 고도화

3 **넓어진 경제운동장에서 기업 FTA 활용 제고**

1.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FTA 이행위원회 적극 가동**

- 각국 비관세장벽,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FTA 이행채널(공동위, 무역구제위 등)을 통한 적극 대응 추진
 - 특히, RCEP·아세안 등 무역장벽 증가추세 지역은 중점적 대응, 선거로 불확실성이 큰 美·EU는 안정적 통상현안 관리 추진

2. 통상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역 다변화 · 다각화**

-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 *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누적, 만개사) : ('22) 2.8 → ('23) 3.0 → ('24) 3.3
- K-푸드 수출확대 및 고물가·식량안보 시대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통상네트워크 적극 활용 및 추가 시장확장 추진
 - * [농수산물식품 수출액] ('04) 34억불 → ('23) 120억불 / '23년 김 수출 7.9억불
칠레, 인도, 몽골, 조지아, 태국 등 농수산물 시장 및 SPS 규범 협상에 전략적 대응

3.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FTA 활용지원 개편**

- 「FTA 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강화로 신통상규제 대응 지원
 - 1380 통합 콜센터 개편, 지원기관 연계 강화*, 전담인력 확보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 신통상이슈 대응역량 강화
 - * 종합센터 ↔ 18개 지역거점(FTA통상진흥센터) ↔ 통상지원기관간 연계 강화 추진
- FTA 전문인력양성과 함께, 무역조정지원 개선(일회성 자금융자 → 기술·경영 혁신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 애로사항 해소
 - 그간 단기 운영자금 지원 위주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전문기관의 '기술·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 중심으로 전환

2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및 경제안보 강화 총력

1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다자 협력 강화

1. IPEF 공급망 협정 전략적 활용

□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협정인 IPEF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美·日·濠 등과 공급망 협력 심화

* ⁽²⁴⁾협정발효·이행기구구성→⁽²⁵⁾회원국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 → ^(26~27)프로젝트 고도화

① (위기대응)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초대 의장국으로서 인태지역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조기 확립에 기여

○ (사전억제) 일방조치 등 대한 의견 제시 및 협의 요구 등 통해 교란 확산 억제

* A국이 원자재 수출제한('22년 팜유, '23년 원광) 발동시 협의 요청(서면답변 의무)

○ (사후대응) 교란시 위기대응네트워크 가동

* (예) 니켈 수급위기→ CRN 통해 협조 요청→ 재고확보·신속통관 등 공조 협의

② (안정화) 복원력 개선 위한 공급망 재편 대응 및 핵심분야·품목 협력

○ (역내 공급망 전환) 역내 투자 확대, 물류·인프라 개선, 공동 R&D, 표준협력 등 통해 중장기 역외 → 역내국가로 공급망 재편

○ (핵심분야·품목) 경제안보, 국민 건강 등에 특히 중요한 분야·품목을 식별, 회원국간 리스트 공유 통해 역내 공급망 위험 이해 제고

③ (심화협력) 기술선진국 및 자원부국 등과 IPEF를 활용한 협력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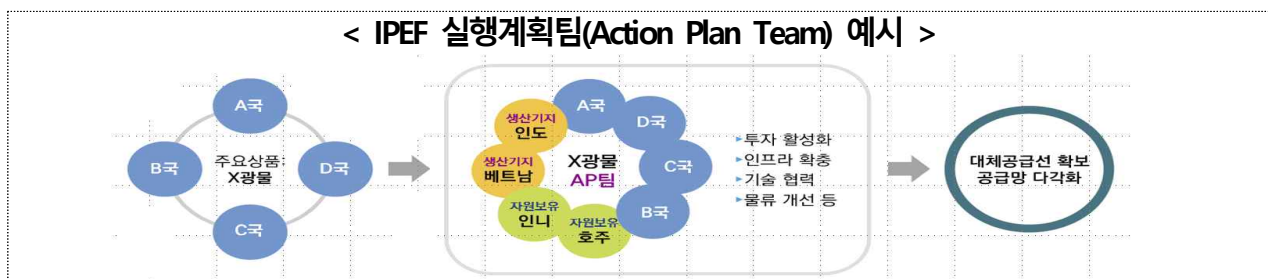
○ IPEF 실행계획팀(Action Plan Team)*을 활용하여 공동 프로젝트 발굴, 14개국 합동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 통해 공급망 협력 확산

* 최소 3개 회원국이 통보한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 별로 실행계획팀을 구성, 공급망 복원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행계획을 1년내 공급망 위원회에 제출

○ ‘한-호 공급망 이니셔티브*’ 등 통해 개도국 공급망 역량 강화 지원

* 베트남, 말련 등 핵심품목 선별, 공급망 위기 관리 정책 공유 등 공동 추진

< IPEF 실행계획팀(Action Plan Team) 예시 >



2. 핵심협력국과의 **공급망 파트너십(SCPA*)** 통한 규범 확산

※ 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 **(배경)** 핵심 공급망 협력 국가와 실질적이고, 신속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양자 파트너십 체결 추진, 공급망 통상 규범 고도화**
 - **(목적)** 교역 및 산업구조, 투자환경 등 고려한 **맞춤형 공급망 협력 추진**
 - **(분야)** 산업공급망 3050 선도 프로젝트(배터리·반도체·자동차 등) + 바이오·재생에너지 등 첨단분야 등 양국 간 핵심 분야 특화
- **(주요내용)** 공급망 교란 대비 **준비·복원·복구 3대 협력의무(3Rs) 규정·긴급연락망 구축, 분야별 협력 구체화 등 요소 포함**
 - **(3Rs)** ①**준비**^{Readiness} ②**복원력 제고**^{Resilience} ③**교란·조치 복구**^{Restoration} 등 협력조치를 단계별로 분류하고, 상세 의무수준 규정

공급망 3Rs 협력 주요내용

Readiness(준비)	Resilience(복원)	Restoration(복구)
• 사전경보시스템 협력 • 교란 징후시 통보 • 공동 스트레스 테스트	• 대체 수급처 발굴 • 핵심기술 공동 R&D • 표준, 상호인정, 인력교류	• 무역조치 자제 • 조치시 즉시 통보 • 협의절차 마련

- **(핫라인구축)** 공급망 위기 발생시 **긴급연락망 통해 공급망 정보 공유**
 - * 국장급 정례회의체를 통해 투자, 공동 연구, 표준 등 협력 과제 발굴 및 촉진
- **(무역원활화)**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장벽 최소화**, 공급망 취약 품목 등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 **(협력고도화)** 협력분야 대상 위기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훈련 실시
- **(추진방안)** 우호국과 모델텍스트 공동마련('24) → **첨단산업·에너지 등 공급망 안정화 분야 위주로 중점 협력 대상국 확대**(~'27)
 - 상대국별 특색 등 고려하여, 기술선진국과는 **의무수준 고도화**하고, 개도국과는 **역량 강화 및 협력 중심** 등으로 협정 구성(모듈방식)
 - '24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27년까지 5~6개국으로 점진 확대

1. 첨단산업 기술개발 지원 강화

- (기술개발 지원) 국제통상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 강화 방안 모색
 - *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확보 위한 원천핵심기술개발 및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추진 중
- (R&D 협력) 정부간 양자 R&D를 중심으로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 중립 등 핵심 R&D 협력 강화를 추진하되 다자 R&D 협력도 병행
 - * '23년 R&D 국제협력 예산은 총 3,321억원(전체 R&D의 5.9%)
- 전략적 경제협정의 주요 우방국과 국제공동 R&D 先제안 및 추진

2. 첨단기술 확보 및 공급망을 보완하는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 (투자 IR) ①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 ②첨단 산업 대규모 투자, ③경쟁력 있는 소부장 생태계 등 우리 강점을 최대한 활용
 - (특화단지) 첨단전략(12개)·소부장(10개) 특화단지를 핵심 거점으로 국내 앵커기업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기업 투자를 전략적 유치
 - (지역본부) 주한외국상의* 등과 협업하여 한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추진('24.下)
 - * AMCHAM은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전략' 제언('24.3월)
- (인센티브)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 대폭 확대('23년 500→'24년 2,000억원)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인센티브 강화(투자액의 최대 40→50% 지원)

3.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복귀 활성화

- (제도 개선) 유턴 인정업종에 유통업 추가, 국가·첨단전략기술, 미래차 부품 등에 대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의무면제 등 제도개선* 추진('24년)
 - * 유턴범위확대·요건완화 등 내용으로 '유턴지원전략 2.0' 발표('24.5.7)
- (유턴 보조 확대) 보조금 예산 대폭 증액*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턴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 확대**('24년)
 - * 유턴보조금(억원) : ('20) 200 → ('21) 500 → ('22, '23) 570 → ('24년) 1,000
 - ** (現)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 → (改)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

3 무역 · 투자 및 기술안보 강화로 전략자산 촘촘히 보호

1. 수출통제 대상 확대 및 이행체계 강화

- (제도)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 역할 수행토록 제도 개선
 -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 外, 다양한 다자간 공조에 따른 통제품목 추가 등 대상 범위를 확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등 추진)
 - 다만, 산업계 영향 및 대외관계 등 고려 → 공조의 범주를 명확화
- (이행)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수출통제 이행체계 강화
 - 유관부처 및 동맹국 등과 관련 정보 교환 등 합동 이행체계 강화

2. 투자안보 확보를 위한 투자심사 강화

-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투에 대한 직권심사(Call-in) 도입, 국가 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M&A도 심사대상으로 추가

3. 촘촘한 기술보호망 구축을 통해 기술안보 강화

- (제도) 유출자 처벌수준 상향, 기업·대학 대상 기술관리 강화 및 우회 방식을 통한 기술유출 통로 차단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등 정비
 - 국내외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보호 필요 기술은 신속히 국가핵심기술로 추가하고, 범용화된 기술은 과감히 해제하는 등 매년 보호대상 기술 현행화
- (국제협력) 바세나르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국제적인 기술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입장 반영 및 국제공조 강화

* 양자, 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체제 내에서의 논의동향 및 주요국의 보호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협력

미국의 통상정책

◆ 글로벌 헤게모니 국가 지위 유지를 위해 중국 견제 강화, 기술격차 확대, 동맹국 공조 강화 등에 초점

- 중요 기술 분야(① 반도체·양자·AI, ② 바이오, ③ 청정에너지)에서 **中 영향력 최소화** 및 **자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시행

美 과학·기술생태계 강화 전략

전 략	주요 내용
① 국내 투자 확대·유치	■ 반도체 분야 : 반도체과학법(5년간 520억 달러) ■ 바이오 분야 : 바이오 행정명령 ■ 청정에너지(배터리/핵심 광물 포함) 분야 : IRA(보조금, 세액공제)
② 기술적 우위 보호	■ 수출통제 : 中에 최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 수입규제 : 中산 태양광 반덤핑·상계관세 및 물량 제한 ■ 유출입 투자 통제 : 對美투자 심사(CFIUS), 해외투자 제한
③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 다자 협력 : G7·Quad·IPEF·MSP ■ 양자 협력 : EU(TTC)·日(JUCIP)·韓(SCCD)·인도 등

1.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강화

- (R&D) 차세대 반도체 분야 기술·인력 협력*,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설립 및 첨단 팹간 협력*** 추진

* 한미 반도체포럼,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 설립 등 차세대 반도체 협력 추진

** 예일 존스홉킨스 등 세계 최고 대학연구소 內 설립 기술협력 플랫폼 기능 및 공동 R&D 수행

*** 나노종합기술원-NY Creates 간 첨단 팹을 활용한 반도체 공동연구, 소부장 테스트베드 수행 중

- (인재교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확대('23년 정상합의 - 각국 2,023명 교류)
- (플랫폼) 한미 SCCD*에서 한미 CET**, 한미일 산업장관회의('23.8 신설) 등 협력 플랫폼 확장,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 등 민간 협력의 場 마련

* (SCCD) 공급망·산업 대화('22.5 장관급 격상), 반도체·수출통제 등 분과운영

** (CET) 핵심·신흥기술 대화('23.4 신설, 양국 안보당국간 협의채널)

2. 공급망 다자협력 주도적 참여

- (한·미·일)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시 공동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EWS) 협력 및 주요 품목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 연구 추진

* 재외공관을 통한 EWS 협력 및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계기 3국 공급망 협력 유기적 연계

- (MS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우리 기업 참여 MSP 사업 확대 및 성과 도출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적극 추진
* 美 국무부 주도로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총 14개국 참여(‘22.6월 발족)
- (IPEF) ‘24.4월 발효된 공급망 협정(Pillar2) 이행 협력 확대와 함께, ‘핵심광물 대화체’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

3. 유사 입장국 공조, 韓 우호세력 확대를 통한 통상 리스크 관리

- (유사입장국 공조) 한미일 산업장관회의(‘23.8월 신설) 등 美 포함 우호 국간 소다자 협력 채널 활용, 美 산업정책 영향 최소화 공조
- (우호세력 확대) IRA 혜택 폐기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미국 내 우호세력 확대·지속 관리
* 우리기업 對美 투자지역 주지사, 상·하원 의원, 한-미 합작투자기업 등 활용

4. 對美 통상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 (아웃리치) 관계부처 및 민간이 긴밀히 소통하여 美 정책분석 및 민관 합동 아웃리치 활동 추진
- (네트워크 구축) 통상이슈 발생시 美 주요인사와 즉시 접촉 및 협의 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경제단체 등 對美 네트워크 구축 추진

2 [對EU] 첨단기술 공급망 중심의 협력 플랫폼 다각화

EU의 통상정책

- ◆ 경제안보 및 역내 산업공급망 확대 정책 추진, 다수의 규제법안 도입
 - (對中 정책)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팅 전략 추진, 중국산 전기차 反보조금 조사(‘23.10) 및 역외보조금 조사(‘24.3) 실시
 - (경제안보 정책) 기술 유출 차단 및 경제 인프라 보호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23.6)’을 발표하고,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 마련
 - (산업 정책) 역내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투자지원 등을 포함한 ‘반도체법’, ‘그린딜 산업계획(‘23.2)’ 발표

※ 아울러, ‘CBAM’·‘배터리법’ 등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도 지속 추진

1. 새로운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한 한-EU 연대 확대

- (EU 협력) Green & Digital Twin 전환과 연계한 협력 플랫폼 확장
 - 한-EU 정상회의(‘23.5) 계기 개설된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반도체* 등 분야별 협력채널 신설 검토
- * 한-EU 반도체 공동연구 및 연구자 포럼을 통한 반도체 R&D 지속 협력

- (국가별 협력) 개별국과의 경제·산업·통상네트워크를 활용한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 성과 달성
 - 첨단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대화」 및 「한-네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정례개최 등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 지속
 - 폴란드(방산), 체코(원전) 등 주요 수출·수주 분야 협력대상국과 산업 협력위·경제공동위 등 양자간 채널을 통해 협력 강화
 - (제3국 협력) EU 주도 이니셔티브(글로벌 게이트웨이 등) 공조·활용을 통해 글로벌 협력, 우크라 재건 공동지원 등 제3국 대상 협력 공조 강화
 -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입찰 참여 지원, 게이트웨이 수혜국들과 TIPF 등 체결시 3자간 협력(韓-EU-해당국) 내용 포함 추진
- * EU 글로벌 게이트웨이: 아프리카, 중남미, 아태지역 등 개발도상국 대상 디지털/에너지/교통/보건/교육분야 인프라 투자 이니셔티브('21~'27, 공공·민간 도합 총 3,000억€ 투자)
- EU 및 우크라이나 인접국가(폴란드)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공동 지원 및 각종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적극 지원
- * 우크라 관계부처(인프라부·에너지부·경제부·환경자원부)와 소통채널 구축('23), 한-폴란드 우크라 재건협력 MOU('23.7), MDB 플라자 계기 우크라 재건사업 설명회('23) 등 既추진

2. 민관협업 강화로 EU 新통상규범의 능동적 활용 기회 발굴

- (민관 협업) EU 경제법안별 의무조항 등 핵심내용을 적시 전파하여 우리 기업 사전 준비 및 정책 반영을 통해 경영 리스크 경감
 - 민·관 쌍방향 소통을 위한 'EU 경제통상규범대응센터(가칭)'를 산업부내 연내 구성하여 법안별 우리 업계 영향, 애로사항 관리 체계화
- (EU 교섭) 아웃리치 다각화를 통해 차별적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 EU 집행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로 아웃리치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법안 마련 과정에 우리 산업계 참여 활성화 기반 확충

주요 법안별 국내 영향

법안	국내 영향
EU 반도체법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 심화 可
탄소국경조정제도	對EU 수출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의무 발생
공급망실사지침	일정 규모 이상(EU내 순매출 4.5억 유로 초과 등) 기업에 인권·환경 영향 실사 의무화

3 [對日] 미래 지향적인 한·일 경제통상 新협력관계 구축

일본의 통상정책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유사입장국 협력 강화 추진

- 低물가·低임금·低성장 탈피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각의 결정)
 - ▲혁신산업 성장 지원, ▲그린·디지털 전환 및 첨단 반도체 지원, ▲日내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경제안보 강화
- 글로벌 위기 대응 및 자유무역·신뢰 구축을 위한 유사입장국 협력
 - 안보·경제 현안 관리·해결과 新산업 육성을 위해 美·EU 등과 결속·연대 강조 및 미래성장 주역인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추진

◇ '23.3월 정상 방일 이후 8차례 정상회담 통해 한일관계 정상화 및 미래협력 기반 마련*

* (정상 합의) ▲수출규제 해소, ▲협력채널 개설, ▲글로벌 현안 공조, ▲新산업·新에너지 협력

1. 다자간 공조 : 유사입장국으로서 글로벌 아젠다 공동 대응

- (한·미·일)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공동 R&D 등 산업 기술 협력 추진 및 ▲GSSA 등 통상규범 공조 대응
- (한·일·중) 역내 공급망 안정화 및 안정적 투자·교역 환경조성 협력
 - * 한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등 3국 협의체를 활용, 교류 및 GX·DX 등 협력 발굴
-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투자원활화 협정 WTO 체제 편입 및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해 협력
- (제3국 협력) 글로벌 사우스 대상 공동진출 통해 시장·공급망 구축
 - * 한일 기업교류회, 제3국 포럼, 수출금융 공동제공 등 추진

2. 양자간 협력 : 한일관계 개선 계기 산업·통상·에너지 전반 협력 추진

- (공급망) 주요 산업 공급망 민관 협력대화 추진 및 IPEF 필라2 등 다자 차원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도모
- (脫탄소·新에너지) CFE 이니셔티브(日 CFE 공동작업반 참여)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탈탄소·신에너지 협력 확대 추진
 - (수소) 양자 협의체를 통해 ▲공급망, ▲표준·규격, ▲정책협력 등 추진

중국의 통상정책

◆ 첨단산업 공급망 자립화 및 전략품목 수출관리 강화

- (산업정책)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자립형 산업 공급망 구축 추진, 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제 체질 개선 노력

* 반도체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기 3,440억 위안(약 64.6조 원) 출범('24.5)

- (수출통제) 글로벌 공급망 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소재·광물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제한 강화 추세

* ①이중용도품목(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대상 수출통제, ②요소 등 비공식 수출제한

- (통상정책)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자국 중심 글로벌 통상 외연 확장, 기후변화·디지털 등 신통상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

* 대외 개혁·개방을 강조하면서 거대한 소비시장을 기반으로 외자유치 및 대외투자 확대

1. 양국 투자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협력 추진

- (기업지원) 韓中 투자협력위원회 산업부-中상무부 13년 만에 재개 '24. 下

- (공급망) 한-중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 소통 채널 활성화

* (흑연) 산업부-中상무부 공동으로 韓 기업 대상으로 中수출통제정책 설명회 개최

** (요소)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연례 회의 개최 추진(제1차 회의: '23.12, 서울)

*** (협의체) 한중 공급망 협력 조정협의체(기재부-中발개위), 한중 경제공동위(외교부-中상무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산업부-中상무부), 등 부처별 공급망 관련 협의체를 통한 소통 지속

-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FTA 체결 10주년 계기 이행 개선 방안 모색(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수행)

2. 지방정부·산업단지 등 기업 현장 연계형 협력 채널 적극 활용

- (지방정부) 광둥, 장쑤, 산둥 등 주요 교역·투자 지역과 소통 정례화

* 한-광둥 발전포럼, 한-장쑤 경제무역협력교류회, 한-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 (산단협력) 韓 새만금, 中 엔타이·엔청·후이저우 양국 산단 입주 활성화

* 한중 산단은 FTA 체결 계기 개시된 양국 경제협력 시범사업으로, 차관급 협의체 운영 중

글로벌 사우스 현황

- ◆ 글로벌 사우스는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 등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제 무대에서 외교·경제적(공급망 등) 영향력 확대

* 전세계 인구의 약 62.8%, 경제비중(GDP) 20.4% 차지(中 제외, IMF '24년 전망치)

- 세계 질서에서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 중이며 주요국도 협력 강화 노력 중

국가	주요 내용
미국	PAC* 출범, C5(중앙아 5개국)+1(美) 정상회의('23.9) 등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확대 * 대서양협의체 : 대서양을 끼고 있는 유럽, 아프리카, 북미·중남미 국가 32개국
일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23.3)'으로 글로벌 사우스 전략 강화, 글로벌 사우스 국가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9,520억엔 편성('23.11) 등
E U	개도국 원조 및 지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영향력 유지 노력중, 최근 인도-중동-유럽 회랑(IMEC) 등 다양한 연대방안 모색중
중국	일대일로 및 BRICs, SCO* 등 글로벌 사우스와 연대·협력 강화 * 상하이협력기구 정회원국 : 중국, 러시아, 카자흐, 우즈베크,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10개국

글로벌 사우스와 광역 단위의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

1. 다자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블록 구축 및 우리기업 진출여건 조성

- 역대 최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6, 서울) 개최로 아프리카 54개국과 새로운 미래 경제협력 방향 제시

* (정부) EPA 협상개시 선언, TIPE, 핵심광물 파트너십 MOU 등 12건 체결

(민간) 「한-아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 계기 36건의 경제협력 성과 달성(계약 16, MOU 20)

- IPEF, APEC 등에 적극적인 역할·참여 및 RCEP, ASEAN, GCC 등과 협력 수준 제고
-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와 에너지·자원,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 주도 산업화 등 협력 비전 제시

2. 말련, 멕시코 등 중점 협력 필요 국가들과 양자 네트워크 확대·보강

3. 권역·지역(Inter-Region)을 연결하는 광역네트워크*에 적극 참여

* 인도, UAE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공조 및 참여 방안 논의 추진

1. 무역금융·인증·마케팅 등 글로벌 사우스 '넥스트 수출시장' 발굴·개척 지원

- (금융) 우리기업 수출·수주 확대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지역 대상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23년 76조원 → '27년 90조원으로 확대 추진
 - * 글로벌 사우스 무역보험 공급액(조원) : ⁽²⁰⁾53.6 → ⁽²¹⁾57.0 → ⁽²²⁾70.0 → ⁽²³⁾75.5
- (인증) 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미국, EU 등 글로벌 노스 중심의 상호협약 품목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23년 186품목→'27년 230품목)
- (마케팅) 탄소 중립,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시장별 특화 마케팅 강화를 위해 글로벌사우스 내 중점무역관* 113개소(현 92개소)까지 확대
 - * 주요 업종에 특화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전담 인력·예산을 배정하는 무역관
 - (예) (뭄바이) GP센터, (멕시코시티) 스마트시티, (쿠웨이트) 스마트팜 중점무역관 등

2. 우리기업 생산기지를 공급망 재편 등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전반으로 확산

- 정부간 협력채널 강화, 현지 기업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인도^{내수공략}, 멕시코^{북미/중남미 진출}, 아세안^{중 생산기지 이전} 등 현지 거점 진출·투자 지원
 -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24.3월 현재 동남아 6개, CIS 1개, 서남아 2개, 중남미 2개)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법률자문, 현지 네트워킹, 정보제공 등 현지 경영 지원

3. 글로벌 사우스 전반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확장·고도화

- 지질·광물자원 역량강화, 핵심광물 공급망센터 등 통해 아프리카, 중앙아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 구축 추진
 - * (예시) 베트남, 인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칠레 등
- 「우즈베크·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대화」, 「한-칠레 자원협력위」 등 전담 협력채널을 가동해 우리기업 현지 공급망 구축 밀착 지원
 - * (칠레) 국내 기업이 리튬 생산, 리튬 가공, 양극재 생산 등 검토, (카자흐) 지자연 현지 리튬 공동탐사 진행중 (탄자니아) 국내기업 흑연 공급망 구축
-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통해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과 상호 호혜적인 핵심광물 협력관계 구축 및 공급망 안정화 기반 확대
 - * '25년 상반기 아프리카 최대 광업행사인 「Mining Indaba」 등 계기 1차 회의 개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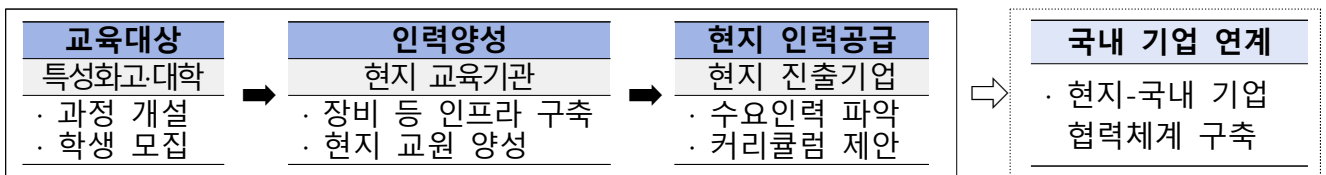
1. 현지 산업인력 공동양성 프로젝트(2024-2027) 추진

① (TASK) 기자재 지원을 활용한 현지 인력 교육 강화('24~'27년 2,080명)

* 기존 ODA 내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사업* : 필리핀^{농기계}, 라오스^{섬유}, 우즈베크^{농기계}, 방글라데시^{섬유}, 파라과이^{식품가공} 등 8개국 진행중

② (시범사업) 우리 기업들의 현지 수요와 연계하여 뿌리, 조선 등 인력 양성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과의 산업인력 공동양성 흐름도(안)



- 우리 기업 진출이 많고 인력양성 협력 인프라를 보유한 인니·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시작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확대

③ (본사업)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과 우리 기업의 산업인력 수요 연계 (산업부, 외교부 등 협업)

* ▲KOICA 직업훈련기술교육원 및 현지 교육기관을 통한 뿌리산업 숙련 인재 양성, ▲석박사 과정 지원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 ▲산업인력 귀환 지원 등

◇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27년까지 총 3,500여명 이상 양성 목표

2. 공급망 · 기술 · 그린 ODA 전략적 추진

① (공급망) 글로벌 사우스에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하여 광물자원 개발·상업화 기술을 지원하고 우리 첨단산업 공급망 확보 연계

* 現 몽골·우즈베크 「희소금속센터」 운영중 → 베트남 등으로 확대

② (기술) 전기차 생태계 조성 및 생산·제조 기술 전수 등 협력기반 조성

* (사례) 인니 전기차 충전 시스템 구축('22~'26), 파라과이 EV 시범보급('22~'26)

③ (그린) 친환경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에너지 협력기반 구축

1 신통상규범 형성에 주도적 참여

◆ 주요국이 기후·환경·디지털 규범 도입과 함께 다자 차원에서 IPEF
청정경제 협정 등을 통해 기후변화 공동 대응중

분야별 신통상규범 주요 내용

분야	주요법안	주요 내용
기후· 환경	美 「인플레이션축법」	美 생산 전기차 등 일정요건 下 보조금 지급
	IPEF 필라3(청정경제)	청정경제 전환 관련 정책·기술·표준 분야 협력체계 마련
	EU 「공급망실사 지침안」	역내·외 기업에 인권·환경 침해 여부 보고·개선 의무 부과
디지털	EU 「디지털시장법」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방지 및 역내 산업 보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전자상거래 원활화, 신뢰가능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

1.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

① 유사입장국 참여하에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마련을 목표로 민관합동
'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을 중점 추진중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현실적 이행수단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 필요(UN총회 계기, CFE 이니셔티브, CF연합 제안)

○ ¹단계 G7 등 핵심 협력국 중심 집중 아웃리치를 통해 글로벌 작업반
출범 후 ²단계 세부 제도 마련 및 다수국으로 외연 확대 추진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등

- (아웃리치) 주요 국제회의* 등 계기 활용하여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기반 확보 및 글로벌 작업반 참여 확산

* APEC-G20 에너지장관회의(8월 페루, 10월 브라질), 기후산업국제박람회(9월 부산), COP29(11월 바쿠) 등

- (작업반 출범) 유사입장국 중심으로 금년중 글로벌 작업반 출범하여, CFE 국제 인증체계 마련('25) 추진

②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외 대응을 통한 우리기업 부담 최소화

○ (대외) 對EU 협의 및 유사입장국 공조를 통해 CBAM 대응부담 경감

- (탄소가격 감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 환경·에너지 관련 세금 등 지지불한 국내 탄소가격을 인정받아 인증서 구매부담 완화 추진

- (인증서요건 완화) 인증서 유효기간, 예치요건, 환매제한 등 과도한 인증서 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 부담 경감 추진

- (대내) 우리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역량 확보와 저탄소 전환 지원
 - (배출량 산정) 기업 설명회,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지원·인력교육 등 추진
 - (저탄소 전환) 혁신기술 R&D 투자 지속*, 탄소감축 설비교체 및 금융 지원

* 수소환원제철 기초기술개발에 269억원 지원('23~'25년)

③ 양·다자 등 협력채널 통해, 국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

- (그린 EPA) 호주 등 관심국과 청정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기후·환경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Green-EPA 체결 추진
- (IPEF 필라3) 既타결('23.11월) 내용 기반 성과사업 발굴, 기업 진출기반 마련
 - * (투자 프레임워크) 한·미·일·호 등 약 3,300만불 규모 펀드 공여 발표(5,000만불 목표)
- (기후클럽) 산업부문 탈탄소화, 저탄소 제품 표준 상호인정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저탄소 제품의 수출 확대 기반 마련

2. 디지털·AI 통상 네트워크 확대

① 글로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통상규범*은 형성단계, 뛰어난 IT 역량 등 바탕으로 규범 선도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 추진

* ▲(전자상거래) 전자인증·서명,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등, ▲(디지털환경) 개인정보, 소비자보호, 사이버보안 등, ▲(데이터biz) 국경간 정보 이전, 서버 현지화 금지 등

- (양자) 한·싱 DPA('23.1월 발효) 이행,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추진 등 통해 유사입장국과 연대 네트워크 구축
- (지역) DEPA('24.5월 발효)·IPEF 등 아태지역 內 협상 채널을 활용하여 美·中·日 등 주요국과 디지털 통상규범 및 협력기반 마련
- (다자)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상 적극 참여

② AI 통상 이슈 점검 및 디지털통상 전문 인력 양성

- (AI 통상) AI 규제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최소화 및 무역장벽化 방지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우호국과의 통상협력 활성화 등 선제적 대응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 AI 통상 대응체계' 구축

* (주요 내용) AI 관련 지재산, TBT, 시장진출 애로 등 통상이슈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인력 양성) 디지털 통상 석사학위 과정 및 학부강좌 개설 지원

2 다자 협의체에서 구심점 역할 수행

① [WTO] WTO 기능 복원으로 다자무역질서 정상화 기여

◆ MC-13 성과도출* 등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대한 회원국 노력 지속

* 아부다비 각료선언 도출, 분쟁해결제도 개혁 가속화,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등

-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통상환경을 위해 다자무역질서 정립이 중요한바, 우리나라는 WTO 분쟁·협상 등 기능 회복에 적극 기여 중

1. 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 추진

-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를 위해 주요국과 함께 개혁논의 선도
 - 개편 과정에서 우리기업의 이해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상소/재심 등 핵심주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MC-13 계기, 금년말 시한 합의)

2. 변화하는 통상환경 적의 대응을 위한 규범 협상 주도

- 투자원활화 복수국간 협정*의 WTO 법적 체제 편입 추진
 - * '24.2월 WTO 투자원활화협정 타결(공동의장국 한국·칠레), 中·日·EU 등 125개국 참여
- 일반이사회 계기 의제화를 통한 논의 지속과 더불어, 반대·유보 입장국의 우려 해소를 위한 공동의장국으로서의 협의·노력 지속
-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수산보조금 협상에 적극 참여
 -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23.10), 수산펀드 기여('24.2)에 이어 균형 있는 추가규율(과잉역량·과잉어획 보조금 등) 타결을 위해 후속협상 지속 참여

3. 산업정책·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WTO 역할 확립

- 무역과 산업정책 논의 협의체 발족 시 적극 참여하고,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주제 발굴을 추진하여 논의 주도
- 각국 기후·환경 조치의 무역 왜곡 최소화를 위해 WTO 무역과 환경 위원회(CTE*) 등 다자 논의의 역할 강화 제안 등 검토

*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무역과 환경간의 관계를 논의하는 정례 위원회)

② (APEC) 성공적인 2025 APEC 개최

◆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 의장국 지위 20년만의 재수임

- 2025 APEC 의장국으로서 푸트라자야 비전 2040 3대 핵심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아태지역 지역경제통합·번영 촉진을 위한 리더십 발휘

*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2040년까지 APEC이 달성코자 하는 비전으로, 3대 핵심 협력 분야로 ①무역·투자, ②혁신과 디지털화, ③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제시

- (무역·투자) 규범기반 다자무역체제 강화, 역내 공급망 협력방안 모색 등
- (혁신과 디지털화)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디지털 격차 해소 등
-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무탄소에너지 확대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중소기업 등 사회취약계층 경제활동 기회 증진 등

- ABAC*과의 대화, APEC CEO Summit 등 다양한 민관교류 행사 개최하여 역내 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 성과 도출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③ (OECD, G20) 다자경제협의체 내 통상 분야 논의 적극 참여

◆ (OECD) 증거 기반 정책연구를 통해 규범 형성(rule-making)을 선도, 산업부는 무역위원회 및 산하 회의체 중심으로 적극 참여 중

- OECD내 보조금, 국영 기업, 디지털세 등 전통적인 통상 의제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新통상의제* 연구에도 적극 참여

* 공급망, 경제안보, AI 규범, 청정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

◆ (G20) G20에서는 '22-25년 간 글로벌 사우스가 의장국*을 수임하는 가운데 무역투자 분과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에 참여

* '22-25년 G20 의장국 : ('22) 인도네시아 - ('23) 인도 - ('24) 브라질 - ('25) 남아공

- '24년 G20 의장국(브라질)이 선정한 무역·투자 분야 중점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정책적 주안점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

* ①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②국제무역과 여성, ③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④WTO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을 중점 주제로 선정

1. 범부처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중심으로, 부처간 유기적 협업 하에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및 전략 점검

- (범부처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정상 순방 전 체계적 성과 발굴을 지원하고 순방 성과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점검
- (산업부 「세일즈외교 지원단」) 경제단체 및 기업과 함께 정상 순방 계기 체결된 민간 MOU 및 계약의 진행상황 및 후속조치를 점검
- (외교부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정상 순방 등 계기 원전, 방산, 인프라 등 분야 수출·수주 성과를 위한 외교 지원 전략 수립·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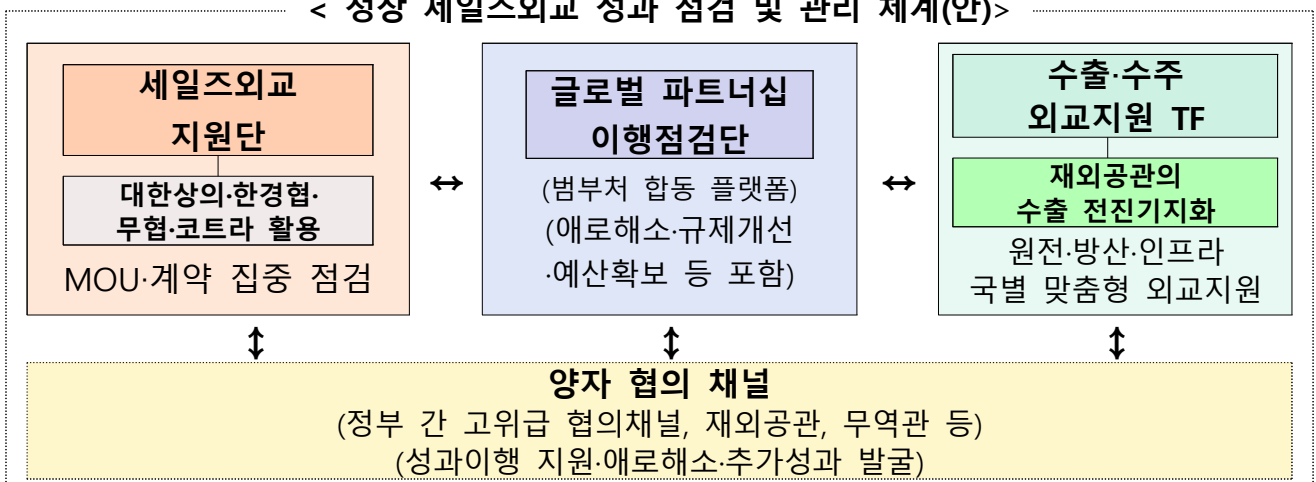
2. 각 플랫폼점검 결과 및 애로사항을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성과 홍보 및 애로해소 추진

* 특이과제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진행현황, 후속지원 등을 밀착 관리

-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장 간담회, 기업 방문 등 추진 및 성과 홍보
- 상대국 관련 애로는 양자채널 통해 해소하고 규제·제도개선, 예산 지원 등은 관계부처간 협업하여 지원방안 검토
- 재외공관 기업지원협의회*에 후속조치 추진 기업이 참여하여 후속 조치 진전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애로사항을 해소

* 공관장 주도 下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참여

<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점검 및 관리 체계(안) >



3. 수출대책회의, 대경장 등 통해 종합적인 점검결과 및 지원방안 논의

1. 범정부 통상플랫폼의 역량 강화

- (무역·기술안보 기능 강화) 산업안보적 측면의 보호 정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경제안보 및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통상 조직 강화 추진
 - 무역·경제안보 핵심 이슈에 전방위적 대응 위해 한국형 산업안보 전담조직 강화
 - * 무역투자실 內 무역안보국을 한국형 BIS로 확대 개편
 - 기존물자와 함께 확대자본·기술·인력 등 국가간 교역 전반의 안보기능 수행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개편('24.8월)
- (통상정보 분석기능 제고) 통상 현안에 대한 신속·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통상 동향·주요 이슈 등에 대한 모니터링·분석 기능 강화
 - 주요국의 통상개입적 산업정책 등에 대한 사전동향파악·사후영향분석 강화
- (해외 주재관 네트워크 확충) 주요 통상이슈 관련 타국 정부와의 소통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주요국·지역 주재관 직위조정 및 충원 검토
- (융합형 통상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기관간 인력 교류 확대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있는 통상인력 육성 추진

2. 신규 규제의 통상리스크 검토 및 국내규제 선진화 추진

- (국내) 법령 발의 전 사전협의 단계에서 사전조율 및 컨설팅 강화
 - (사전조율) 각 부처 통상담당관 등 정부 네트워크, 국조실·대통령실·국회 등 참여하는 주요 회의체 통해 지속 모니터링 및 협의 강화
 - (컨설팅)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제·개정 중인 규제법령을 모니터링 하고, 통상 관련 규제 법안은 각 부처에 컨설팅 서비스 제공
 - * 법령 제·개정안 중 규제가 포함된 법령만 게시하는 포털(1월 기준, 30~40개 수준)
 - (사후대응) 통상규범 위반 소지가 최소화된 국내 규제 도입 추진
- (국외) 정부간 회의체, 의회, WTO·FTA 등 통상 플랫폼 등 기존 네트워크 활용, 신속 현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3. FTA 협상과 우수 외국인력 유치 연계·관리 추진

- FTA 체결 계기 외국 우수인력을 유치하여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 마련